

이재명 “與, 국민적 합의 기초한 횡재세 도입 협의해야”

민주당 최고위...“금융지주 회장들 불러 부담금 압박하는건 직권남용” “과도한 이익 다수 위한 제도가 세금”...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촉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여당을 향해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문제이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 사태에서 위기 덕분에 특별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에너지 기업들일 것”이라며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고(高)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의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20일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직’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데 힘센 사람이 대기잡시고 뜯어가는 것을 자릿세라 부른다.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고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면 그게 바로 세금”이라며 “자릿세를 뜯을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릿세는 힘 자랑이고 횡재세는 합의”라며 “자릿세를 뜯는 데는 힘만 필요하다. 뜯을 때는 기분이 좋겠지만 소외 조폭들의 심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노란봉투법(합법 파업 보장법), 방송3법을 대통령께서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시 ‘땡전 뉴스’ 대신 ‘땡윤 뉴스’가 KBS를 치장하고 있다고 한다”며 “수치스럽지 않느냐. 사회와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찌다가 과거 수십 년 전으로 순식간에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검



22일 오후 경기 의왕역 대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이소영 의원, 전용기 의원 및 참석자들이 교통대책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사에 대해서 “이정섭 검사의 가족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요약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무법천지”라며 “이런 것들이 아마 워낙 일상이다 보니까 버젓이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할 줄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검사의 처남댁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검사의 수사 무마·절대 의혹 등을 주장한 영상이 상영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찾은 비명계 김종민·이원욱

시의회서 간담회...“민주당, 변화해야 총선에서 승리”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22일 광주를 찾아 당내 도덕성과 민주당의 회복을 주문했다.

원칙과 상식을 이끄는 김종민·이원욱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무승부는 커녕 오히려 질 수도 있다”며 “우리가 긴장감 있게 보면 단합할 수 있고, 변화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독주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이고, 국민들 사이에서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 연대가 있다”며 “민주당이 (심판을) 중심에서 끌고 가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팬텀·방탄 정당’으로 불리는 당내 분위기 쇄신

도 촉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팬텀이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 대표에게 쓴소리, 바른 소리하는 이들을 ‘수박’으로 낙인찍는 것이 문제”라며 “정치 흥건된 화된 팬텀은 민주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다. 이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 변화의 최종 기한을 12월 말로 봤다. 이 의원은 “12월2일에 예산 정기국회, 같은 달 20일께 법안 임시국회가 끝나면 모든 정당이 공천 심사 기구와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선거 체계로 빨리 들어간다”며 “국회의원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거 체제 도입 전당의 도덕성, 미래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당 창당과 탈당 가능성에 대해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김해나 기자 khn@

여야 대치에 오늘 본회의 무산

30일·다음달 1일 개최

여야가 이통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다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는 걸로 했다”며 “국회의장과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

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본회의에서 불법안과 함께,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이 있으니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중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최 수석은 “그것도 30일에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민주 ‘암컷 발언’ 최강욱에 당원자격 6개월 정지

광주 북콘서트서 윤석열 정부 비판...최고위 의결로 비상 징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최 전 의원 징계를 긴급히 결정한 것이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일련의

상황은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다”, “경계심이 없고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다”, “이대로 안 된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등 발언이 이어졌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연 북콘서트에 참석해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내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내년 60세 이상 유권자 2030 첫 추월

행안부 인구통계 18만명 많아...정책 등 정치지형 영향 관측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60세 이상 유권자가 18~39세 유권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약 1391만 명으로, 18~39세 인구가 약 1373만명보다 많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는 60세 이상 인구가 약

1324만명, 18~39세 인구가 1417만명으로, 18~39세 인구가 60세 이상보다 더 많았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는 60세 이상 인구가 18~39세 인구보다 확연히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는 각 정당의 정책 개발 등 정치지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노년층의 투표율은 젊은층의 투표율보다 높다.

노년층 유권자가 젊은층보다 많아지는데, 투표율마저 더 높다면 노년층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젊은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노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정치권이 정년 연장, 기초연금 증액 등 노년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층이 상대적인 소외를 겪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